

87,798억 내년 노인복지예산, 경기도의 집중과 선택

김춘남*

Summary

□ 보건·복지·고용 복지지출 30% 돌파 - 대부분 자연증가분

- 복지예산 증가분 9조1000억 원 가운데, 71.5%인 6조5082억 원은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의지와 별 상관없이 이미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임(대부분 연금증가분).
- 자연증가분 외에 큰 폭으로 늘어난 복지예산은 행복주택건설 비용(6160억원), 보훈보상금(1104억원)등임.

□ 적자를 감수한 재정지출 의 배경 / 어르신(서민·중산층)의 생활안정

- 급속한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 됨.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과 투자가 확대되면 세수도 늘어나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함.
-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447만명→464만명, 최대 월 20→20.4만원
- 노인일자리 확대 31만개→33.7만개
-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 등급 운영 5만명→5.3만명
-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181개→273개
- 민간병원도 독감 무료접종 가능(만 65세 이상 어르신, '15년9월 시행 예정)

□ 경기도의 향후 대응 - 집중과 선택

- 지방재정의 결손의 요인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 분담률을 현행 7(중앙)대3(지방)에서 8대2로 바꾸어 줄 것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
- 노인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마련 및 재정확보
 - 가족인식변화에 동반하여 경제·복지·교육 등 정책변화 요구됨.
- 경기도 광역치매센터('13.7월 보건복지부 지정)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
 - 교육사업, 기술지원, 자원조사 및 연구사업, 민관 협력체계 구축
 - 치매상담, 치매검진사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필요

*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/ 365kkim@ggwf.or.kr / 031.267.9344

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참고 작성

1. 보건·복지·고용의 복지지출 30% 돌파 - 대부분 자연증가분

- 정부가 내년도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원 늘린 376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
 - 내년 총지출은 376조 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 원(5.7%) 증, 총수입은 382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조4000억 원(3.6%)증가로 지난 7년 중 가장 높은 5.7%로 정부는 경기부양의를 드러냄.
 - 보건·복지·고용의 복지지출 115조5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사상 처음 30.7%를 넘어섬. 올해 106조4000억 원에서 9조1000억 원 증가하여 8.5% 늘었고 2007년 61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8년만에 88%나 증가한 것임.

-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, 일을 통한 복지 구현에 중점
 - 복지예산 증가분 9조1000억 원 가운데, 71.5%인 6조5082억 원은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의지와 별 상관없이 이미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임. 정부가 복지제도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늘어남. 대부분 연금증가분으로 복지예산이 30% 돌파했다는 의미가 무색함.
 - 자연증가분 외에 큰 폭으로 늘어난 복지예산은 행복주택 건설 비용(6160억 원), 보훈보상금(1104억 원)등임.
 -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자연증가분이 중심이 되는 복지예산 확대에 머물러서는 곤란.

- 65살 이상 노인 70%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조3823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남.
 - 올해 7월에 시작되어 6개월 지급되었지만 내년에는 1년분을 다 지급하게 됨으로 예산이 급증.
 - 국민연금이 2조61억 원,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지급액이 1조2486억 원 늘어남. 건강보험 국고지원 7753억 원임.

2. 적자를 감수한 재정지출의 배경

□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한 것은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과 투자가 확대되면 세수도 늘어나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.

-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을 늘림.
- 급속한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
- 재정 지출이 많아진 데는 불어나는 복지예산의 영향도 큼.

□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복지예산 증가율을 연 6.7%로 잡고 있음.

3. 노인분야 주요사업 내역 및 경기도의 집중과 선택

□ 기초연금지급 : ('14) 52,001 → ('15) 75,824억원(23,823억원, 45.8%)

- 지급 대상 : 447 → 464만명 (최대 월 20 → 20.4만원)

<경기도의 집중과 선택>

- 경기지역 '14년7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69만1천198명
- 전액 2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전체인원의 92.8%인 64만1천458명
-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1천2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
- 지방재정의 결손의 요인중의 하나인 기초연금 분담률을 현행 7(중앙)대3(지방)에서 8대2로 바꾸어 줄 것에 대한 계속적 요구 필요

□ 노인일자리 운영 : ('14) 3,052 → ('15) 3,326억원(274억원, 9.0%)

-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: 280 → 300천개
- 재능활용형일자리 : 30 → 37천개
- 한국노인인력개발원(115억원),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(79억원) 지원

<경기도의 집중과 선택>

-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호환영역의 활용방안 모색 및 활성화 필요
- 행정부처 및 관련기관의 연계 도모를 위한 도의 역할 필요

-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: ('14) 5,849 → ('15) 5,972억원(123억원, 2.1%)
 - 수혜대상 확대 : 44.0 → 45.5만명(15천명 증)
- 양로시설 운영 지원(신규) : ('15) 320억원(순증)
-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: ('14) 1,433 → ('15) 1,313억원(△120억원, △8.3%)
 - 노인돌봄기본서비스 : 539 → 624억원
 - 노인돌봄종합서비스 : 851 → 638억원
 - 단기가사 지원서비스 : 17 → 24억원
- 노인단체 지원 : ('14) 402 → ('15) 112억원(△291억원, △72.3%)
 -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: 12.8억원(전년동)
 - 대한노인회 지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) : 16 → 18억원
 -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50억원(전년동)
 - 베이비붐 세대 사회참여 지원(참여자 교육 등) : 7.9억원(전년동)
 -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인건비, 사업비 지원 : 22.5억원(전년동)
- 치매관리체계 구축 : ('14) 176 → ('15) 142억원(△35억원, △19.8%)
 -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: 16 → 18억원(1.7억, 10.7%)
 - 광역치매센터 운영(11 → 13개소) : 46 → 48억원(2.1억, 4.5%)
 - 광역치매센터 확충사업(11 → 13개소) : 11억원(순증)
 -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: 17 → 17억원(△0.2억, △1.3%)
 -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(26 → 2개소) : 60 → 8억원(△52억, △86.7%)
 -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(6개소) : 37 → 39억원(2억, 5.5%)

<경기도의 집중과 선택>

- 전국 치매추정인구 576천명(경기도112천명), 치매유병율 9.4%
- 경기도 치매인구는 매년 6~7%씩 증가, 치매당사자 및 가족의 어려움이 심각, 가족 동반자살 등 사회문제 대두
- 경기도 광역치매센터('13.7월 보건복지부 지정)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육사업(지역사회 치매전문인력양성), 기술지원(치매당사자,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), 자원조사 및 연구사업, 민관 협력체계구축(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홍보) 등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
- 치매상담, 치매검진사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필요